



유가 상승은 산업 전반과 가계의 물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 동력을 해치는 주요 악재로 작용한다. 유가가 오르면 실질구매력이 약해져 거시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진_배정현 기자

올해 물가 목표치 달성 가능할까

정부, 3.2% 설정... 불안요인 산적 물가안정책임제 등 대비책 부산

작년 한 해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4%나 치솟으며 서민 경제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정부가 각종 정책 수단을 있는 대로 모두 동원하고 나섰지만 이상 기후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가격이 뛰면서 물가 통제에 한계를 드러냈다.

올해에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란과 미국의 대치국면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과 국내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등 적잖은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물가 안정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가상승 주범은 농축산물·석유류

물가 당국으로서 2011년이 고난의 해로 오래 기억될 법

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연초부터 이상한파와 구제역이 겹치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뛰어올랐고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지루하게 이어지며 채소와 과일류 가격이 급등했다. 하반기 들어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작황이 좋아지자 일부 채소류 가격이 내렸지만 전반적인 상승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물가의 '주범'은 연간 9.2%나 오른 농축수산물이었다. 2001~2010년 사이의 농축수산물 가격 평균 상승률이 4.8%인 점을 감안하면 유난히 많이 오른 셈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28.1%), 고춧가루(50.6%), 쌀(11.1%) 등의 오름폭이 컸다. 채소류는 9월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2.8% 내렸다.

석유류는 지난해 13.6%나 올랐다. 최근 10년간 평균 상승

올해도 물가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전기·하수도·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의 잇단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데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유가 상승도 우려되는 요인 중의 하나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2%다.

를 5.3%의 2.5배다. 리비아 사태 등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탓이다. 국제유가는 4월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오르는 등 장기간 100달러대 고공 행진을 펼쳤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설탕(22.7%), 소금(28.6%) 등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비(4.3%)의 인상을 부추겼다. 전세가격도 4.6%나 올라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4.0%로 정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이자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3±1%)에 간신히 턱걸이했지만 여러 가지 '꼼수'의 산물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금반지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값이 내리거나 상승폭이 적은 품목을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물가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방식으로 산정한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4.4%로 목표치를 한참 벗어난다.

물가안정대책이지만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팔 비틀기' 식 물가 억제책을 관철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통신요금이 대표적이다. 6월 방통통신위원회가 요금 인하 드라이브를 걸자 SK텔레콤이 9월에 기본료를 1천 원 내린 것을 비롯해 KT는 10월, LG유플러스는 11월에 각각 기본료를 인하했다. 그 결과 이동전화료와 스마트폰의 연간 이용료가 각각 3.0%와 0.5% 내렸다.

은행들은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낮춰야 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임무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당국'을 자처하며 가공식품 등 각종 제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거나 내리는 데 한몫했다. 정부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미뤘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등록금 면제,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도 물가 압력을 더는 데 기여했다.

올해 3%대로 내릴 듯... 국제유가 변수

올해 물가 전망도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지난해 3월부터 3%대를 이어오고



작년에 물가가 4%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해에는 3%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사진_안정원 기자

있다. 지난해 12월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0%로 6개월 연속 4%대를 유지했다.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심리가 높다는 의미다.

작년에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올해 줄줄이 오를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올해 하수도요금을 7년 만에 올리고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에 한 해에 두 번 올랐다. 연간 인상률은 9.63%. 하지만 원가보상률이 여전히 낮아 적자가 쌓이고 있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기요금은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산업활동의 기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공언했으며 품목별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을 지시했다. 사진_진성철 기자

초 비용이므로 전기요금 인상은 곧바로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상품들의 가격을 올리는 2차 충격을 야기한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유가 상승도 우려되는 요인의 하나이고 미군이 철수한 뒤 종파 분쟁을 겪는 이라크 정세도 국제유가에는 부담이다.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동전쟁 발발과 함께 제1차 석유 위기가 닥쳤던 1973년에는 유가가 단숨에 4배로 뛰어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란의 제재가 지금처럼 단순한 경제 제재에 그칠 경우 국제유가는 100달러 내외, 국내 물가상승률은 3.5%로 추산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6개월 이내의 단기전에 돌입한다면 국제유가는 160달러 내외, 국내 물가상승률은 5.5%로 각각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년 이상 장기전으로 진행된다면 과거 1, 2차 석유 위기에 맞먹는 충격이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년 이상 장기전 시나리오에서 국제유가가 210달러 내외, 국내 물가상승률은 7.1%에 각각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 상승은 산업 전반과 가계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동력을 해치는 최대의 악재다. 유가가 오르면 실질구매력이 약해져 거시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연간 성장률이 0.2% 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2% 포인트 상승하며 경상수지는 20억 달러가 악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란 변수를 제외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작년보다는 둔화해 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은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재정 위기로 인해 경기회복세가 둔화함에 따라 수요 측면의 압력도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그나마 물가에는 희소식이다.

작년에 4%의 고물가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이 올해에는 3%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이란 제재가 현 단계에서 그친다는 전제에서다. 이란과 미국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폭 줄여야 한다면 국내 도입 원유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가안정책임제 시행... 원가검증자문위 구성도 검토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2%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올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품목별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을 지시하자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과 정책에 대해 부처별 1급 간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제대로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앙 공공요금,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쌀, 배추, 고추,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 등 9개 품목,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 모범업소와 지방 공공요금,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을 각각 해당 부처 1급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원가검증 자문위원회’가 눈에 띈다. ‘필요할 때’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원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원가 구조를 외부에 맡겨 일일이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물량 공급을 대폭 늘려 잡았다. 2009년산 정부미 20만t을 방출한 데 이어 밥쌀용 수입쌀 21만t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2011년분 10만t은 도입 시기를 올 4월에서 작년 12월로, 2012년분 11만t은 내년 4월에서 올 4월로 각각 앞당겼다. 애초 34만t을 사들이려던 공공 비축미는 26만t만 구매한 채 작년 말 매입을 중단했다. 2월 이후로도 쌀값 불안이 지속되면 2009년산 재고에서 13만t을 추가 방출하고 수입쌀 판매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올해 쌀 60만t이 시장에 추가 공급돼 연간 총 공급물량은 작년보다 5만t이 많은 460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농협 신용·경제 부문 분리(신경 분리)에 맞춰 5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전국 협동조합 쌀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지역 단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합해 2020년까지 쌀 100만t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5대 권역별 청과도매물류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축산물 대형 패커(도축·가공·판매를 수행하는 업체)를 집중 육성해 직거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 관광, 보건·의료산업 등의 경쟁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관련 서비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KDI와 공동으로 소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과 관광·교통 분야의



정부는 2월 이후로도 쌀값 불안이 지속되면 2009년산 재고에서 13만t을 추가 방출하고 수입쌀 판매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사진 연합뉴스DB

시장 구조, 경쟁 상황 등을 분석한 뒤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정보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선진국 수준인 2%대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재완 장관은 “유통단계가 길고 복잡해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 활성화, 합리적 소비 유도 등의 노력을 계속한다면 물가상승률을 장기적으로 현 수준보다 1% 포인트 낮추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경제부 기자 yonglae@yna.co.kr